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례 무엇을 담았나... 시·도민 삶 총망라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

규제 완화, 재정 지원 등 핵심

민주당이 30일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설치 특별법안은 자치권 강화부터 첨단산업, 문화관광, 농수축산, 교통·의료에 이르기까지 통합 이후 지역민 삶과 직결된 특례로 구성돼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통해 광주전남을 국가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특례의 핵심 취지다.

◆ 지방 자치권 대폭 강화

특례는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와 계획 승인 권한을 넘겨받아 광역 차원의 자율적 정책 결정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 속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개발·에너지·미래산업 집중 육성

지역 개발 분야에서는 특별시의 개발사업 추진 때 건축신고,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다수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는 특례를 두고 특별시장 소속의 개발사업 일괄처리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대거 실렸다. 송·변전 등 공동 인프라 구축과 전력계통 연계, 분산 에너지 전력망 구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태양광·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아닌 특별시장이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0만kW를 초과하는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상풍력 부두, 전용항만 부두 건설사업 등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합특별시장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 또는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병행 생산·판매하는 영농형 태양광 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지구 내 농지에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 설비는 생업을 위한 농업시설로 본다.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할 수도 있다. 국가는 메가클러스터 내 시설에 대해 건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에너지 분야의 산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 제출. /뉴스1

업·기술·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는 안도 포함됐다.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 구축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설비투자, GPU 구입비용,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에 있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통합특별시를 인공지능·에너지·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행정·재정적 우선 지원을 명시하고, 첨단전략산업 광역 메가센드박스, 이차전지 국가 전략거점 육성, 국방특화 클러스터, 석유화학·철강·조선산업 특구 지정 등도 특례로 담겼다.

해군과 해양경찰 합정의 정비·수리·개조(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합정 MRO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특례로 제시했다.

◆ 역사·콘텐츠·관광 규제 완화

문화산업진흥지구와 시설의 지정·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마한 등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시 국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인공지능과 문화콘텐츠를 융합한 국가산업단지를 우선

지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특별시장이 지정한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국가는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회도서관 등 국립 문화·관광시설의 분관 또는 지역관을 설치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 공간계획 및 광역교통 지원 강화

500㎡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권한도 특별시로 이양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특별시 도로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두고, 초광역 교통망 철도·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대중교통 운영 지원과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특례가 법안에 담겨 있다.

특별법안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계기로 권한·재정·규제를 묶어 한 번에 푸는 패키징형 국가 특례라는 점에서 기존 특별자치단체 법안보다 훨씬 강도 높은 자치와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평가다. /뉴스1

전남광주특별법 특별법 공무원 근무지 보장

민주당 전남·광주특별법안 당론 발의 "공무원 불이익 배제 원칙·거주 이전비 지원"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통합을 담보하는 특별법이 국회 발의된 가운데 공무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전 근무지 지속 근무 보장'도 포함돼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 공무원들은 전남과 행정 통합 이후 '근무지 이동'과 '인사 불이익' 등을 가장 불안해 하며 특별법 초안의 "근무지가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등의 문항을 "보장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약칭 광주특별법)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른바 다음 주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한 뒤 설 연휴 시작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킬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광주특별법'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부터 출범한다. 이를 놓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 등은 "통합 후 최일선에서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의 갑자기 근무지가 광주에서 전남으로, 전남에서 광주로 바뀔 수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중전 근무지 이동을 제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발의된 특별법 최종안에는 제10조 조항에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으로 인해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는 안된다"고 명시됐다.

또 초안의 제30조에 담겼던 "특별시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중전(광주시·전남도)의 지역에서 근무한다" 규정은 34조로 변경됐으며 3항에 "특별시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중전의 광주시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수정됐다.

"4급 이상의 경우 인사 운영을 달리 할 수 있다" 내용은 "다만,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바뀌었다.

이 밖에도 제37조에 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넣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등 지급, 자녀 학업 및 출산·양육 지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환급, 교통·복지·문화·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특별시가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특별법으로 중전 근무지를 보장하는 한편 '광주특별법'이 행정 조직이 개편되는데 따른 공무원 신규채용, 승진인사 등 세부적인 안도 정부차원에서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체제 개편 지원단(행안부지원단)을 설치하고 현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대전·충남지역 등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조직·인사·재정·자치법규를 담당하는 3급 1명과 5급 3명·6급 3명 등의 직원을 행안부지원단에 보내 광주시의 인사 규정 등을 설명한다.

행안부지원단은 자치구 공무원까지 구성이 완료되면 공무원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통합 후 근무지 이동과 신규 공무원 채용 방식 등을 논의한다. /뉴스1

나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 "유종의 미 거둔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제1회 추경안 등 30건의 안건 심사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월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월 13일 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6년도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사실상 제9대 나주시의회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정 운영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최정기 의원 대표 발의)'이 채택되었으며 황광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재남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는 제9



대 의회가 시민과 맺은 약속을 완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모두가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나주시의회는 변화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민생을 지키는 자리에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